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 힘찬 도약

도, UAM 실증 및 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미래 도심항공교통 전략 구체화

전북형 UAM 도입 위한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 관련 사업 육성 · 인력 양성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도내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도내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북자치도가 UAM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전북형 UAM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새만금개발청, K-UAM 드림팀과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UAM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민·관·군 공역 협의체를 발족하여 공역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도내 14개 기초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UAM 설명회를 진행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UAM 도입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별로 적합한 UAM 도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전북형 UAM 도입을 위한 추진 목표와 전략이 검토됐으며, △초·중·장기 사업 모델 △공역 검토 및 노선 계획 △버티포트 후보지 등의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는 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다양한 자문 의견이 제시됐는데, 특히 지역 현안에 맞춘 시기별 사업모델과 공역 협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UAM 도입 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동시에, 관련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하여 지역 내 UAM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UAM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한 대응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무형유산 신규 보유자 인정서 전달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보유자들이 인정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무형유산 신규 보유자 선정

무형유산 보유자 · 보유단체 인정서 전달… 지호장 박갑순 · 사기장 이명복 · 시조창 임 환 · 지장 최성일 · 김만경외 애밋들노래보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도청 회의실에서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인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2024년도 신규로 도 무형유산으로 인정되는 지호장(지호제작) 박갑순, 사기장(분청사기) 이명복, 시조창(완제) 임환, 지장(한지제조) 최성일 보유자와 김제만경농요 보유단체인 (사)김만경외애밋들노래보존회가 참석했으며, 가족 및 동료 등 약 2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지호장 박갑순 보유자는 1999년 한지공예에 입문하여 지호공예 전통기법을 전수받아 전국한지공예대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특선 등 다양한 전승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한지문화진흥원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기장 이명복 보유자는 내장도예 벽암 故라희용 장인의 전수자로서 전북무형문화재 보존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인화문 분청사기 개인전을 21회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조창 임환 보유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이자 부친인 故임산본 선생으로부터 시조창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시조 부문 장원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지장 최성일 보유자는 부친인 故최종수 선생의 제자로서 3대째 전주에서 한지를 제조하고 있다. 2017년에 전주한지장 제1호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0월 10일 전주에서 '제3회 한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제만경농요 보유단체인 (사)김만경외 애밋들노래보존회는 2003년 故이부휘 선생에게 전수받아 2018년 사단법인을 설립 이후 주 2회 전승활동 및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도시숲 조성 사업 위해 100억원 예산 확보

4개 시 · 군 총 7곳에 10ha 규모 조성… 국비 50억 · 지방비 50억

탄소흡수 · 도시열섬 완화 ·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위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의 예산으로 4개 시군에 7개소의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순창군에 약 10ha의 녹지가 추가로 조성되며, 탄소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열섬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되는 도시 숲은 지역별 환경과 필요에 맞춘 기능별 도시 숲으로 구성된다. 전주시 덕진공원과 김제시 만경강 낙조 전망대는 각각 2.5ha 규모의 탄소 저장 숲으로, 익산시 유치원 생태습지는 1ha의 도시열섬 완화 숲으로 조성된다.

또한, 전주시 탄소 국가산단과 익산시 전라선 폐철도 등 4곳에는 총 6.5ha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숲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도시 숲들은 도심 내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숲은 기후변화 대응 기능 외에도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녹색 인프라는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 숲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도시 숲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녹색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 자전거 모범도시 선정

자전거 관광코스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도, 자전거 문화 확산에 앞장… 지속적 발전 목표

고창군이 자전거와 관광을 결합한 혁신적인 도시로 변모한다.

전북자치도는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자전거로 즐길 수 있는 테마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창의 대표 관광자원인 고인돌 유적지, 고창읍성, 석정온천 관광지를 자전거 도로로 연결해, 자전거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번 자전거 모범도시 사업은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고창군은 자전거 구입 보조금과 문화시설 입장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은 자전거 관광코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전거 이용의 대표 도시로 고창군을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북자치도와 고창군의 협력을 통해 고창이 자전거 문화 관광지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자전거가 고창군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신항만, 신규 국가무역항으로 지정 · 발전시켜야"

나인권 도의원, 도정질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을 신규 국가무역항으로 지정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은 현재 2026년까지 선석 2곳 우선 개항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을 개항하려면 필수조건이 정부로부터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받아야만 국·내외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해 무역항만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개항이 불과 일 년 여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새만금 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군산항에 이어 도내에서 2번째 국가관리무역항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군산항은 기존 산업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새만금 신항만은 시도하지 않은 첨단산업 및 미래산업의 거점 항만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늦어지다 보니 새만금 신항만의 배후단지 조성 또한 난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 충족 및 확대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자투자 100%로 계획된 배후단지 조성은 국가관리무역항 미지정으로 인해 투자자를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 침체상황에서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재원을 민간투자에서 국가재정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이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국가관리무역항이 신속히 지정돼야 함을 공감하며, 조속한 행정절차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다만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중립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尹정부 추진 가루쌀 정책은 실패"

작년 기준… 쌀 재배했을 때보다 1ha당 230만원 소득 감소

생산 · 도정 등 손실… 민주 이원택 의원 "정책 재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의 가루쌀 정책은 농민과 정부 모두에 손해를 끼치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쌀 재배 대신 가루쌀을 생산한 경우 1ha당 230만원의 소득이 감소했고, 2026년에는 가루쌀 재고로 인해 2,3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이 표본조사한 2023년 가루쌀 생산량(432kg/10a)과 2023년 쌀 생산량(523kg/10a), 2023년 수확기 정곡 가격(20만2,797원/80kg)을 기준으로 쌀과 가루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계산한 결과, 쌀을 생산할 경우 1ha당 1,325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가루쌀의 경우 1,095만 원에 불과해 1ha당 230만원의 소득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은 생산과 재고 처리 과정만이 아닌 도정과 판매과정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 일반 쌀의 경우 도정과정에서 72% 정도의 수율을 보이지만, 가루쌀의 수율은 67%에 불과해 도정과정에서 5%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가루쌀은 생산·도정·판매·재고 등 모든 단계에서 쌀을 재배했을보다 큰 손실이 발생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가루쌀 정책은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손해만 주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가루쌀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 불균형 · 지역 소멸 부추기는 통합 추진 중단해야"

권요안 도의원, 도정질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완주-전주 통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후 이틀 후인 7월 26일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완주군민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통합을 공식화했으며, 아무런 소통도 없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로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요건인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지사는 특례시 지정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주군이 행정구로 전락해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잃게 되는 것인데, 특례시 지정으로는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자치권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완주군은 일방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완주시 승격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주시 승격에 대해 도지사가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하여 지방자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시를 없애고 다시 자치권을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히려 통합에서 분산으로, 집중에서 분권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완주군민의 우려를 단순히 논리 비약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시군 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균형있는 발전 전략을 통해 특별한 전북을 향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번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인한 완주군민의 상처, 완주군민 간 그리고 완주와 전주 간 갈등,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등 이에 대한 책임은 통합을 앞장서서 추진한 지사께서 반드시 져야 한다."며, "완주군민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자치도 산림연구원, 데미샘 자연휴양림 일원 탐방로 정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섬진강의 발원지인 데미샘이 위치한 데미샘 자연휴양림 일원 탐방로에 대해서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유림 숲길 정비사업으로 데미샘 생태탐방로 구간에 낡은 야자 매트와 목교를 교체하여 보행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했으며, 지난 8월에 새로이 문을 연 숙박동 주변 탐방로에도 보행매트를 설치했다.

또한, 지난해 조성돼 데미샘 계곡의 숨은 폭포를 엿볼 수 있어 새로운 볼거리가 된 목교에 대해서도 도색작업 등 새 단장을 완료했다.

데미샘 자연휴양림 주변의 탐방로는 휴양림 입구부터 데미샘까지 이어지는 계곡형 생태탐방로와 데미샘 발원지에서 천상데미, 오계치를 거쳐 선각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등이 개설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가을철 생태탐방을 즐길 수 있다. /이만호 기자